

2.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 전망

최진욱

북한연구실 실장

오바마 대통령이 1월 20일 미국의 44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변화'를 키워드로 내세운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은 여러 가지 면에서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지만, 북한문제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북한문제와 관련 오바마 정부는 두가지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하나는 적극적 외교와 포용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군사력이 아닌 외교가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최우선 순위가 될 것이며 미국의 포용정책의 새로운 장을 열겠다고 하였다. 선거 캠페인 기간 중 집중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으나 김정일 위원장과의 대화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북한문제와 관련 두 번째 메시지는 핵 불용이다. 오바마의 '변화'는 어디까지나 접근방법에 관한 것이며 핵무기와 핵물질에 대하여는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느슨하게 관리되고 있는 모든 핵물질을 4년 내에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새로운 핵무기가 생산되는 것을 금지해 핵무기의 확산을 감소시키도록 하겠다고 공언하였다. 궁극적으로 핵무기 없는 세계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5년간 핵 물질 생산시설의 건설을 동결하고 에너지 생산을 위한 핵 물질을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는 국제핵연료은행 창설안도 나오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정책 방향은 핵심 외교참모에 의해서 재확인되고 있다. 1월 13일 힐러리 국무장관 내정자는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북핵문제를 시급히 다루어야 할 문제로 규정하면서 북핵문제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힐러리는 또 "북한이 합의한 대로 핵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어떤 양보도 하지 않을 것이며 해제했던 제재도 다시 가하고 새로운 제재도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는 핵폐기가 전제되어야 가능하다고 하였다. 1월 15일 수잔 라이스 유엔대사 내정자는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해칠 뿐만 아니라 핵 확산과 관련된 긴급한 우려의 대상"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를 제거하기 위해선 다각적인 압력이 계속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바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북한은 두 개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첫째, 북·미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면서도 핵문제에 대한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1월 17일 외무성 담화를 통해 "조선반도 핵문제의 본질은 미국 핵무기 대 북한의 핵무기"라고 주장하면서 "북·미관계가 개선된다 해도 미국의 핵위협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한 북한의 핵보유 지위는 추후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고 하였다. 이는 미국과의 관계개선에는 적극적으로 나서겠지만 핵포기는 관계정상화이후 군축 차원에서 다루어야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둘째, 북한문제가 경제, 이란 문제에 밀려 현상 유지 차원에서 관리되지 않고 우선 정책과제로서 적극적으로 다루어지길 희망하고 있다. 북한의 의도는 1월 17일 북한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에 잘 나타나 있다. 동 성명에서 북한은 대남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북·미관계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는 대미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대내외 정책방향은 내부적으로 이완된 체제 결속을 도모하고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올인하는

한편, 남한과는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최근 북한은 내부결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장을 단속하고 당의 역할을 강화하는 대내적 조치를 취하여 왔다. 그러나 내부통제 강화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를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외부 긴장을 필요로 한다. 예컨대, 지난해 하반기 민간 단체의 전단살포에 대한 강력항의와 개성공단 제한 조치 등 대남 강경조치를 취하였고 새해 벽두부터 김정일의 현지지도는 군부대로 시작되고 있다. 1월 3일 방문한 류경수 제105탱크사단은 6.25 당시 서울에 처음으로 들어온 부대이다. 김정일의 건강악화로 엘리트들의 충성심 과시 차원에서 대남 강경기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내부결속을 도모하고 오바마 정부의 관심을 끌어내기 위하여 북한은 남북관계 긴장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변경시킬 수 있다면 부수적인 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긴장완화가 지나쳐 군사적 도발로 갈 경우는 오히려 북·미관계 개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할 것이다. 또한 남한내 진보세력의 입지 축소 및 남한의 강경대응을 초래할 수 있으며 남북경협이 파탄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는 것도 고려할 것이다.

북한은 당분간 미국의 태도를 지켜볼 것이나 미국의 반응이 기대에 못미칠 경우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려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 북한은 상반기 이후 북·미관계의 실질적 성과 미약, 북한의 경제상황 악화, 통제강화에 따른 주민반발 등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남북관계에 오히려 적극적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당면 목표는 미국으로부터 안전보장을 확보한 후 외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확보하는 데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인 바, 비핵화 진전 이후 실리차원에서 남북관계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군사적 긴장고조 의도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받아 들여 맞대응함으로써 긴장을 고조시킬 필요가 없이 차분히 대응해야 할 것이다. 당분간 남북관계 보다는 한미공조의 강화와 남한내부의 의견수렴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만 상반기 이후 여건이 조성될 경우 북한에게 적절한 명분을 주어 퇴로를 열어주는 대신 남북간 거래 방식을 바꾸는 등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